

‘안정 속 변화’ 50대 젊은피 발탁, 이인용 ‘대외총괄+준법’

(CR담당 사장)

스마트폰 사령탑에 52세 노태문 3인 대표체제 유지 등 안정 방점 황성우 등 부사장 4명 사장 승진 이인용 고문, 대외업무 사장으로 이르면 이번주 조직개편 마무리 사업지원 TF, DS 부문 등 ‘관심’

삼성전자는 이번 사장단 인사에서 적지 않은 위기감을 드러냈다.

정기 인사 발표를 또다시 결국 해를 넘겨 발표했다. 반도체 시장 침체로 인한 실적 악화와 함께,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중이라 부담 감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20일 단행된 삼성전자의 사장단 인사 내용을 살펴보면 안정을 추구하는데 방점을 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기남 부회장과 김현석 사장, 고동진 사장 등 3인 대표 체제를 올해에도 그대로 유지키로 하면서다.

단, 3인 대표 역할은 상당수 축소됐다. 김기남 부회장은 DS부문장, 고동진 사장은 IM부문장 보직만 유지했다. 김현석 사장은 CE부문장과 삼성리서치장을 겸임하지만, 생활가전사업부장 자리는 내려놨다.

종합기술원은 황성우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원장 자리도 맡게 됐다. 황 사장은 종합기술원에서 나노 일렉트로닉스 랩장, 디바이스&시스템 연구센터장과 부사장 등을 거친 전문가다. 차세대 R&D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맡았다.

무선사업부는 노태문 사장이 고동진 사장으로부터 지휘봉을 넘겨받았다. 노



사장은 52세로 이번 사장단 인사 세대 교체에 핵심 인물로 꼽힌다. 갤럭시 시리즈를 개발한 스마트폰 전문가로, 개발실장에서 사업부장으로 승진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미래 먹거리 핵심인 네트워크사업부

장 전경훈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했다. 삼성전자가 5G 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네트워크사업부에 더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 사장은 삼성전자 DMC 연구소 차세대 연구팀장과 개발팀장 등을 역임한 전문가로, 지난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주도하며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 사업 기반을 마련한 공을 세운 바 있다.

이인용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의 현직 복귀도 이번 사장단 인사 핵심이다. CR(Corporation Relations)담당 사장으로다. 이 사장이 최근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던 만큼, 삼성전자가 준법감시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사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삼성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장을 역임했으며 2017년 11월 사회공헌업무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 인사를 통해 앞으로 삼성전자뿐 아니라 계열사 및 준법감시위원회, 외부와의 소통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 인력을 보강하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도 마련했다. 경영지원실장으로 사업지원 T/F에 있던 최윤호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및 보임했으며, DS부문 경영지원실장에도 삼성 SDS 사업운영총괄을 맡고 있던 박학규 부사장을 승진 보임했다. 이들은 각각 여러 해외법인과 다양한 사업 분야를 거친 재무전문가로, 경영 안정화와 리스크 관리 등에 역량을 발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삼성전기도 이날 새로운 지휘자를 맞이했다. 삼성전자에서 메모리사업부 플래시 설계 팀장과 솔루션 개발실장 등을 역임한 경계현 사장이다. 부사장에서 승진 임명됐다.

한편 삼성전자는 조만간 정기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도 마무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주 중 발표가 유력하다.

가장 큰 관심은 사업지원 TF에 쏠린다. 사업지원 TF는 삼성전자와 계열사

들을 관장하는 ‘미니 컨트롤 타워’이지만, 정현호 사장 등 핵심 인물이 검찰 조사와 구속 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자리를 채워왔지만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업무가 쉽지 않아 이 같은 역할을 누가 맡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몇년 전 국회 등에서 삼성에 미래전략실을 없애라고 해서 미래전략실이 사라졌는데, 최근엔 삼성과의 ‘소통’이 어렵다며 이와 유사한 조직을 만들라는 압력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 재계 1위인 삼성과 총괄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조직을 삼성이 만들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DS부문 조직 개편도 주목할 부분이다. 올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다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증산이나 차세대 제품 개발 등 여러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서도 예년보다 많은 임원 승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LSI사업부와 파운드리 사업부에 더 확실한 분리 정책을 펼지 여부도 관심사다. 파운드리 사업부가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이유가 LSI사업부의 기술 유출을 우려한 탓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최근 LSI사업부 생산라인이 대부분 기흥으로 이전을 마무리하면서 양 사업간 구별이 분명해진만큼, 대외적으로 이를 드러낼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분사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다. 파운드리사업부 부진과 함께, 주가가 급상승하면서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CAP)’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면서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진맘 뻔 진에어... 국토부 제재 해제 시그널에 재도약 기대감 ‘솔솔’

장기제재에 진에어 운영 난항 1년4개월 묵묵부답 국토부 보고서 추가 개선사안 요구



진에어의 기종 777-200ER 여객기 모습. /진에어

진에어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이례적인 장기적 제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올해 반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진에어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국토교통부의 제재를 받기 시작해 현재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였다. 일본 여행 보이콧·홍콩 시위 장기화 등으로 항공업 전체가 부진하며 수요 감소에 따른 타격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제재로 인해 기존 노선을 대신할 만한 인기 노선에 신규 취항하지 못해 새로운 수요 창출·전락도 무의미해졌다.

그런데 최근 국토부가 진에어의 최종 보고서에 답하고 나서며 올해 안에 제재 해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적 항공사들의 여객 성장률은 소폭 개선됐지만 저비용 항공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적 항공사 전체 여객수는 1321만9000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선 여객수가 764만2000명, 국내선 여객수가 557만7000명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각각 1.4%, 14.2% 늘었다.

반면 저비용 항공사(LCC)들의 국내·외 여객수 추이는 여전히 하향세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천공항과 한국항공공사 등에 따르면 국적 저비용 항공사의 지난해 전체 여객수는 534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제로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4개월 연속

역성장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제선 여객수가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해 12월 LCC 국내선 여객수는 316만명으로 6.8% 증가한 반면, 국제선 여객수는 21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4%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특히 국토부로부터 장기 제재를 받고 있는 진에어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여객은 물론 공급 좌석과 운항 편수도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진에어의 전체 여객수는 91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 감소했다.

또한 국토부로부터 제재를 받기 전인 2018년 7월 기준 진에어의 공급석은 88만6407석이었으나 지난해 74만4591석을 기록했고, 운항편도 제재 이전 76만1550편에서 최근 65만8274편까지 대폭 줄었다. 신규 운수권 불허, 추가 항공기 도입 제한 등의 제재가 전체적인 수익성 악화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이유다.

진에어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요구한 건 사외이사 비중을 늘리라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국토부에서 보완요청을 했고 담당 팀에서 준비 중이다. 일본노선이 대폭 감소하다보니 대신 동남아 쪽으로 비행편수를 늘렸다”며 “그러나 일본을 4번 왕복할 시간에 동남아 같은 경우 1편밖에 못 띄워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공급석은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제재때문에 싱가포르나 몽골 등 운수권에 있어 진에어가 배제됐다. 근데 다른 항공사의 경우 그런 것을 다 받았고, 진에어는 기존 노선을 갖고 운영하다보니 신규 노선 수요를 끌어오지 못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진에어 제재

를 시작한 지 약 1년4개월만에 추가 개선 사안을 요구하고 나서며 올해 제재 해제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말 진에어가 최종 제출한 경영문화 개선 보고서에 대해 추가 개선 사안을 요구했다. 이는 진에어에 대해 제재를 한 지 약 1년 4개월만이며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지 약 4개월만에 답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진에어의 제재 해제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오던 국토부가 올해 안에 제재를 해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제 소명자료를 다시 진에어가 제출해야 한다. 진에어가 최종 제출한 자료를 그간 봐왔고 평가된 결과에 따라 어떤 점에서 보완이나 설명이 필요한지 진에어에 소명 요구한 것이다”며 “(진에어가) 그에 대한 소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추가 제출한 것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회 활성화도 분명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도 강조해서 말씀드릴 게 맞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